

교수일반분과/사회과학/04/

## 한일관계, 용서의 정치학

이병수(고신대 교수)

### 1. 들어가는 글

2019년 여름을 전후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거취 문제와 한·일 갈등의 두 가지 사태가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사안들을 블랙홀과 같이 빨아 당기고 있다. 혹자의 표현처럼 『햄릿』의 유명한 두 대사가 머리를 짓누르는 나라 형국이다. “재앙은 하나씩 오지 않고 한꺼번에 무리 지어 몰려온다.” “불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정말로 재빠르게 연달아 일어난다.” 오늘의 난마 같은 국내정치와 외교 상황과 난항에 직면한 대한민국호의 전도에 걸맞은 말이다.

그 두 사건 외에 대한민국에 중요한 일들 예를 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의 문제’ 등 긴급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 물론 두 사건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면 참으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사회적 주제들이 이 두 가지 사건들에 의해 거의 가리워졌다는 것이 안타깝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아파트에서 새터민 42살의 여성과 6살 아들이 굶어서 사망한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났다. 통장에는 잔고가 0원이었고 냉장고에는 유일하게 고춧가루만 있었다고 한다. 무관심의 참극이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무엇을 했는가라고 진노할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이 든다. 얼마 전 베트남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사하기도 했다. 최근 경북영덕에서 일하던 4명의 근로자가 질식사 사망하게 되었다. 무슬림 난민에 대한 혐오도 도를 넘었다.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정의와 인자(공휼)를 가장 중요시한다. 이런 중차대한 현안들은 그렇게 별로 주목 받지 못한 채 한일관계와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문제가 언론에 거의 도배되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한일관계가 이번에 제대로 청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일관계는 새로운 관계로 정립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작금의 한·일 갈등은 단순한 이해 조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sup>1)</sup>로 본다. 최근 한·일 갈등은 지난해 10월말 대법원의 일제 징용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한 법적 판결로 촉발되었지만 역사적·법적·외교적·경제적 및 군사적 문제로 확산되었다. 이것에 대한 국내의 방안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일본의 피해보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주장과 일본 식민지 지배가 범죄였기에 청구권이 개인의 피해 보상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것과 연루된 역사논쟁의 관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국제법의 법적관점, 기술 분야의 소재·부품 생산의 경쟁력 강화의 경제적 관점, 대일외교 능력강화의 외교적 관점,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와 관련한 군사적 관점이 중첩되어 있다. 이런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되 발표자는 새로운 관계를 일본에 대한 용서에 기초해서 일본과 함께 중국 러시아 북한을 대비한 동북아의 평화공동체 건설을 이루기 위한 협력과 “용서의 정치학”<sup>2)</sup>의 신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1) 조성렬, 경향신문, 2019. 7.23 27면

2) 하워드 요더, 예수의 정치학 책 참고

## 2. 신학적 접근

혹자는 한일 갈등 관계는 역사적 상처와 아픔이 많기에 수 백 년이 지나도 변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체념적 시각이 온당한가? 현대 신학자들 중 체념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적 원리와 가치를 현실에 실현하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인간의 전적타락과 부패의 부정성 때문에 어떤 성경적 이상적 원리와 가치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염세주의와 냉소주의가 팽배하다. 그러나 인간의 죄 성 가운데 하나는 “체념의 죄”이다. 조직신학자 다니엘 L. 밀리오리에 의하면 “체념이란 인간 역사의 사악한 세력에 무조건적으로 묵종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무엇인가가 변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더 정확히 말해 무엇인가가 더 나은 상태로 변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심하고 비웃는 것이다.... 이런 체념의 결과로, 더 큰 정의를 위한 작은 기회들과 평화와 화해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조치들이 무시되거나 냉소적으로 일축 한다”<sup>3)</sup>고 지적한다. 기독교 역사학자 자르슬로브 펠리간은 기독교 역사관은 비관적 낙관주의라고 주장했다. 현실은 비관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볼 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문명의 충돌」의 저자이며 국제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은 오래전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중국·일본의 동북아의 긴장의 해결책은 한국에 달려있다고 강연한 적이 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의 교회가 세 나라를 복음화 함으로 복음 안에서 화목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한일 갈등문제를 체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신학적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일관계는 4가지 측면<sup>4)</sup>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일본에 대한 적대자 이미지로 일본은 한국에게 악이고 원수라는 시각이다. 장 폴 사르트르가 「달린 방」<sup>5)</sup>에서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라는 표현에서처럼 일본을 ‘지옥’으로 보는 이미지이다. 지나 온 한일관계의 역사를 살펴 볼 때 이런 이미지는 사실적 측면도 있지만 정상적 민족주의가 아닌 종족주의에 편승한 일부 정치인들에게 악용되기도 한다. 둘째, 일본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예찬하는 이미지이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뼈저리게 경험한 아픔 중에도 일본 차, 전자 제품과 의약품등을 너무나 좋아하고 일본의 경제력 업적을 칭송하고 일본 제품을 사족을 못 살 정도로 일본을 예찬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영훈 교수를 비롯한 저자들의 「반일종족주의」 저서가 일본과 관련한 문제를 반일종족주의 차원을 넘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객관적 시각에서 보고자 하는 노력이 잘못된 자료와 접근 가운데는 일본을 예찬하는 이미지로 비치게 되어 그것이 친일로 비쳐질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극단적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일본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접근을 지향하는 실제적 이미지를 찾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적대자 이미지도 아니고 이상적 및 예찬적 이미지도 아닌 제 3의 길 대안을 찾기 위한 접근이다. 이 자세가 오늘 우리 한국에 가장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13장에 기초해서 한·일 관계를 믿음·사랑·소망의 관계에서 본다. 무엇보다도 한·일 갈등 관계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사랑 가운데 ‘희망의 이미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안에서 먼저 사랑과 용서의 정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아베와 관련된 전쟁 전범들의 철저한 사과와 반성 없이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화해의 목소리를 기독교회 안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고 용기 있게

3) 다니엘 L. 밀리오리/신옥수 역,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p. 274-275

4)

5)

전달하느냐와 둘째, 용서와 화해의 목소리를 대한민국 일반 사회에도 얼마나 설득력 있고 용기 있게 전달 할 수 있느냐 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한일관계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정치학이다(존 하워드 요드의 「예수의 정치학」 참고). 반역과 불순종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예수님처럼 기독교인인 우리가 일본을 먼저 용서하는 용서의 정치학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한국사회에 점진적으로 확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은총에 근거 한다. 그 은총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복수 및 인과응보의 반복되는 죄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이 기독교와 힌두교와 불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두 종교는 인과응보의 업과 그 업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윤회의 끈임 없는 반복으로 계속된다. 하지만 차이점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인과응보의 연쇄적 죄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주권적이고 선제적인 은총이다. 이 예수의 '용서의 정치학'적 접근이 한일관계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일본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과 광기의 역사 그리고 진정한 참회가 없는 가운데 우경화 되어져 가는 아베 정권을 생각할 때 용서가 거의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해방 70 년 넘게 한일관계는 역사의 유령에 사로잡힌 지 미래보다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의 현실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 정도 기독교인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가해자 일본보다는 20% 넘게 기독교인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한국이 앞장서서 용서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필자는 요즈음 국내·외 정치에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매우 절실하게 느낀다. 정의의 관점에서 행한다고 하지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았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에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겪었지만 그의 정적들 전두환·노태우를 용서하고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대구·경북의 중요인물인 김중권 씨를 등용한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과 누구보다도 화해의 정책을 펼쳤다. 그것으로 인해 한일관계 특히 한일 문화 교류가 그 어느 정부 때보다도 활발하게 발전했다. 그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기독교적 정신에 기인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일의 불편한 관계로 잃게 되는 수많은 정치·경제·군사 및 사회적 손실을 생각해 보자. 경제학자 김병연 교수는 “역사 문제가 일으킨 불은 경제를 넘어 안보로 번지면서 양국이 입을 잠재적 피해를 위험하리만치 키우고 있다. 불길을 잡아야 하는 정부는 서로를 응징하는 ‘티포탯(Tit for tat) 전략’으로 오히려 불길을 퍼뜨리고 있다. 그 결과는 엄청난 비용 청구서로 양국 앞에 던져질 수 있다”. 용서가 얼마나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성비 높은 것인가를. 용서가 가장 위대한 극일이다.

### 3. 한·일 사태 과정과 구체적 방안

최근 한·일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1965년 체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sup>6)</sup>. 그 체제는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등 4개 협정이 양국관계의 토대가 됐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식민지 지배의 법적 문제와 보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위안부 사건, 근로자 강제동원에 대한 한국 측 문제 제기는 양국관계의 법적 근간을 훼손했다며 반발한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 정부가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은 데서 모든 문제가 파생했다고 본다. 일본 정부가 여전히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른 진정한 사과를 회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개개인에 대한 인권유린

6) 경향신문 참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은 별개라는 인식이다. 이같이 양국 갈등이 일본산 전략물자의 수출규제로까지 미치는 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한 언론<sup>7)</sup>은 최근 한·일 사태를 6·25전쟁과 한·미 동맹 체결 이후 가장 심각한 외교 현안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첫 충격이 가라앉고 사태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이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고려할 사항으로는 한·미·일 동맹, 산업 전략의 변화, '역사 정치'(정치적 역사 해석)의 오·남용, 동아시아 전후 국제 질서(샌프란시스코 체제) 붕괴, 정경 분리라는 전후 국제 무역 질서의 균열, 포퓰리즘 부상과 민주주의 위기 등이 주제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전문가들에 의해 한·일 갈등 해법에 대해 구체적·현실적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세 가지 논의가 제시된다. 첫째<sup>8)</sup>, 문재인 정부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한다는 뜻을 천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헌법 규정상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또 청구권 협정은 50여 년 동안 역대 정부가 준수하며 양국 관계의 정치적·외교적·법적 기반이 됐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이낙연 총리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도 이런 원칙이 나와 있다. 입장문에는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조약을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조약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했다'고 되어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한·일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동의해도, 그 문제하고 대통령이 헌법상 요구되는 한·일 기본 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그 협정은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청구권을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 협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누리 교수에<sup>9)</sup> 의하면 1965년 '한일협정'에 기초한 현재의 조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 그 이유를 그는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적 사례를 들면서 설명한다.

“2012년 노벨 평화상이 유럽연합에 주어진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 상의 ‘숨은’ 수상자가 독일과 프랑스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12~2013년은 ‘독일-프랑스의 해’였다. 50년 전인 1962년에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 시도가 본격화되었고, 마침내 1963년 1월23일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독불협정, 즉 ‘엘리제 조약’이 체결된 것을 기념하는 의미였다. 2012년에 노벨 평화상이 유럽연합에 수여된 것은 기실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가 유럽의 평화를 가져온 유럽연합을 탄생시켰음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철천지원수’였다. 1870년과 1945년 사이에만 세 차례의 큰 전쟁을 치렀다. 1870년 보불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그것이다. 이런 적대의 역사를 가진 두 나라가 ‘화해’함으로써 마침내 ‘전쟁의 대륙’ 유럽이 ‘평화의 대륙’으로 변모할 수 있었고, 나아가 하나의 ‘국가연합’으로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제 ‘철천지원수’(Erbfeind)에서 ‘절친’(Erbfreund)이 되었다. 지스카르

7) 조선일보 참조

8) 위의 자료

9) 김누리, 한국과 일본, 진정한 화해는 가능한가, 한겨레, 2019-07-29 27면

데스탱과 헬무트 슈미트, 프랑수아 미테랑과 헬무트 콜 등 양국의 정상들은 정치 노선과 국가 이익을 뛰어넘어 돈독한 우정을 쌓았고, 양국의 도시 간에는 2500건이 넘는 자매결연이 맺어졌으며, 800만명이 넘는 독일과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상호 교류를 했고, 마침내 역사 교과서까지 공동집필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니 독일인과 프랑스인이 서로를 ‘가장 좋아하는 이웃’으로 꼽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의 역사를 돌아보며 최근 격화되고 있는 한-일 갈등을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도 독일과 프랑스처럼 화해할 수는 없는 것인가. 김누리 교수는 불가능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든다.

(1)한일협정의 주도자가 역사적 정당성을 결여했기 때문이다. 1963년 독불협정과 1965년 한일협정의 결정적인 차이는 피해국 수장의 역사적 상징성에 있다. 프랑스의 드골은 레지스탕스의 지도자였고, 한국의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였던 것이다. 브란트가 나치 과거를 청산하고 주변 국가와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르샤바 게토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나치와 맞서 싸운 반나치 투사였기 때문이다.

(2)한일협정은 ‘강요된 화해’의 산물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후속 조치로서 한일협정은 냉전시대 미국의 군사전략적 고려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지, 한-일 간의 진정한 화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었다.

(3)한일협정은 국민의 동의에 기초한 조약이 아니었다. 협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거듭된 것은 한일협정이 국민의 뜻을 거스른 ‘관제 협정’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일협정은 반성 없는 일본 우익과 성찰 없는 한국 수구의 ‘거짓 화해’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한일협정을 절대적 준거인 양 내세우며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인사들은 올바른 역사의 식도, 상식적 법 감정도 결여한 자들이다.

현재의 한-일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촉발되었지만, 심층적으로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누적된 적대적 반감이 폭발한 것이다. 사실 해방 이후 한-일 간에 진정한 화해의 시도는 전무했다. 냉전 시대에 ‘군사동맹’이라는 허울 아래 덮여 있던 적대감, 냉전에 기생하는 한국의 수구와 일본의 극우의 결탁으로 수면 아래 은폐되어 있던 갈등이 이제 냉전 체제가 해체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누리 교수는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려면 한-일 신 협정 체결을 통해 새로운 한-일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이번 한일 갈등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은 집행으로 해결하고 한·일 과거청산은 장기과제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sup>10)</sup>. 이 입장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교수의 제안이다. 그에 의하면,

-한일 과거청산은 장기과제로서 대처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에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인 강제동원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

10) 김창록, “‘2+2 해법’ 등 잘못…대법 판결대로 일 기업 배상해야” 한겨레 2019. 8.12 4면

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것은 조약 해석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른 타당한 판단이다.

-긴 호흡으로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은 한일 간에 '식민지 지배 책임' 문제가 미해결인 상태로 남아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 문제는 1965년에 한일 양국 정부가 해결하지 않은 채 봉인했던 것이다.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소송을 통해 다투면서 그것을 끄집어냈다. 그들 곁에는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의 시민들이 있었다.

소송이 거듭되면서 '식민지 지배 책임'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관련 국제인권법도 현저하게 발전했다. 그런 가운데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국내의 과거 청산 소송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에 대한 감수성을 키운 한국의 법원이 '식민지 지배 책임'을 미해결 과제로 확인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식민지 지배 책임.' 커다란 과제이다.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차근차근 챙기면서 나아가야 한다. 자료를 더 많이 쌓고, 법리를 더 꼼꼼하게 다듬고, 과제를 찬찬히 풀어나가는 외교 역량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 대법원 판결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이 세 가지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에 기초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 이 모든 다양한 접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사법적·국가적·기업적·시민적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오랜 한일 역사 속에 나타난 가해와 피해의 의식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자세는 바로 이것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많은 갈등과 충돌의 해결책은 어떤 경제적·정치적·군사적·외교적 인 것 같아도 철학적이고 신학적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이 신학적임을 주장하고 예로 그것은 인간이 가장 좋은 환경의 낙원에서 범 죄 한 것과 해결책은 신학적임을 주장했다. 둘째, 위안부와 강제징용피해자를 위한 노력도 정부와 기업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 이 분들과 관련된 가족들의 고통과 피해를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아픔을 가져야 한다. 김복동 할머니가 나의 할머니처럼. 하지만 약속을 한 것은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는 약속의 관계로 이루어진 성경의 언약적 관계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언약과 약속이 깨어지면 신뢰가 무너지고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도 이 언약과 약속이 깨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신학적 기초에 한·일 갈등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 3. 문화이해 노력

한일관계는 서로를 가깝고도 먼 나라로 생각한다. 일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상호이해를 가로 막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알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한·일 갈등의 문제가 일본에 대한 문화이해의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한일 사태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피력되었지만 김병연 교수<sup>11)</sup>에 의하면 "그 뿌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한 몰이해로" 보았다. 문화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자신의 관점으로만 상대를 판단하는 자문화 중심주의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민족주의 및 국민감정을 정치적으로

11)

이용하는 지도자들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김병연 교수에 의하면 한·일간의 문화차이가 생각보다 크다고 한다. 그는 한일 문화의 차이를 두 가지 관점 즉 철학적 관점과 신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한다. 첫째, 무엇보다 한국은 이(理)의 나라고 일본은 법(法)의 나라다. 조선은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삼강오륜과 종묘사직이라는 이치를 기본으로 백성의 정신세계를 구축했다. 조선인에게 이치는 법 위에 있고 심지어 왕권보다 높았다. 이조시대 당파싸움이 심했던 것도 모든 것을 '이'라는 본질에 비추어 보려는 플라톤적 습성에 기인한 것이다. 실용보다 이념을 중시하며 매사에 따지기 좋아하는 한국인의 특질도 이로부터 유래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일본은 무력을 기초로 사회의 질서를 세웠다. 무력 앞에서 백성은 따지기보다 주어진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오래 사는 비결이다. 일본 막부의 기본법인 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에 따르면 “법으로써 이치를 깨뜨릴 수 있지만 이치로써 법을 깨뜨리진 못한다”면서 권력자가 만든 법이 이치보다 우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일본은 법으로 정했으면 싫든 좋든 그것이 끝이 돼야 하는 사회다. 한·일의 문화 차이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이란 신분 체계에서 ‘사(士)’의 의미가 다른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조선에서 ‘사(士)’는 선비를 가리킨 반면 일본은 사무라이(武士)를 말한다. 조선은 이치를 따지는 것을 가장 중시했지만 일본에선 법령 수호가 제일 중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의 강제징용 문제는 ‘이’와 ‘법’의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본다. 한국인은 이치에 맞지 않으면 국가 간 합의도 재고될 수 있다고 믿고 일본학자의 주장처럼 문재인 정부는 ‘정의를 강조’하는 ”인권을 강조하는 법의 흐름에 따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도 재검토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본인에게 있어 협정은 법과 동일한 것이며 이로써 문제가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일본인 다수가 지지하는 것도 그들의 문화 코드로는 최종 권위인 법마저 재해석하려는 한국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더욱이 속죄 받을 수 있는 신(神)이 없다는 것도 일본 문화의 특성이다. 일본에서 개인의 본분은 국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부여받은 ‘야쿠(役)’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이 역할에 실패할 때 일본인은 수치심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사과한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때 위안부에게 저지른 악행은 일본 사회가 떠안기엔 너무 큰 거악(巨惡)이다. 다수의 일본인은 사실이 아니라든가 또는 정부가 내린 결정일 뿐 자신과는 관계없다며 피해 나간다. 이 만행을 인정하면 속죄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일본인은 죄를 용서하는 절대자를 알지 못한다. 이 문화 때문에 독일과 달리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시기 만행을 깊이 사죄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일관계에서 문화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 가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천황 비난은 천황의 상징성을 무시한 ‘문화맹(文化盲)’같은 발언이었다”. 그때부터 한일관계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경제대통령이라던 그는 일본에서의 한류 열풍과 한국 비즈니스를 몰락시켜 수많은 일자리를 잃게 하였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화가 충돌하면 대화와 외교로 풀어야 한다. 그러나 작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 이후 정부는 일본의 대화 요청을 한사코 거부했다. 언론 및 방송에서 정치인들과 한일교류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본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고 경고를 했던 상황이다. 그런데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니 갑자기 양국 협의를 제안한다. 이 비일관성을 일본 시민은 무시와 무례로 간주할 것이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한국을 오만하고 무례한 나라로 생각하게 되었고 아베 정부는 외교 문제에 경제보복을 가하게

되었다. 그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호간의 문화이해의 부족 가운데서 생긴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아베의 태도는 법적인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극우파같이 되자는 파괴적 선동이다. 하지만 한국도, 일본도 이를 통해 ‘문화맹’같은 정치와 정책의 재발을 막아야 하고 그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상호문화 이해 노력이 필요하다.

#### 4. 정치 외교적 노력

우리는 일본에 대한 뼈아픈 역사를 경합한 점에서 감정적으로 일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감정에 매몰되어 과거에 전적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역사의 포로가 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 일본은 국제정치 질서 가운데 한일관계를 보아야 할 시점이다. 지금 전 세계는 일극체제의 미국에서 양극체제의 중국의 부상이 현실로 다가왔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GDP가 1조 6천억 불, 일본의 GDP가 5조억 불, 미국의 GDP가 20조 5천억 불, 중국의 GDP가 15조 억불이다. 2030년이면 중국은 미국의 GDP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학자들은 중국이 국민총생산의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 학문적 인적 자원 및 기타 요소들로 비교해서 중국이 미국을 넘는 패권국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 주변에는 중국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나라가 너무나 많고 그 중 인도와 관계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 인구 숫자이다. 미국이 3억 3천만 인구인데 비해서 중국은 13억이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잠14:28). 성경도 백성이 많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기술도 화웨이를 통한 통신기술 등 놀라운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이 군사정보에 사용될 때 놀라운 위력을 발휘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부상은 많은 약점이 있지만 예사롭지 않다. 이런 점에서 최근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자 그레이엄 엘리슨(Graham Allison)이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그리고 한반도 운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이론으로 이것을 설명했다. 이 이론은 그리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sup>12)</sup>에서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에 따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보았다.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부상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미국에게 새로운 강대국 중국의 부상 때문에 이와 유사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슨 교수는 그 책을 “중국에 관한 책이 아니라 중국의 부상이 미국과 세계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sup>13)</sup>으로 규정했다. 중국은 일로일로 정책으로 중앙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까지 염두에 두고서 패권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북아 패권은 사실 중국으로 이미 들어갔다. 미국이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신아시아 태평양 전략으로 한국·일본·베트남·대만·호주·인도를 포함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일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한일관계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위협한 패권 국가이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어서 중국을 무시할 수 없지만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한일갈등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한국의 정치적 현안중의 하나는 외교적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외교가 가장 필요한 나라”라고 본 김대중은 “외교가 운명을 좌우한다” “우리에게 외교는 명줄”이라고 생애 마지막까지 강조했다<sup>14)</sup>. 이런 상황 가운데 정치 외교적·현실적 측면에

12)

13) 그레이엄 엘리슨, 예정된 전쟁, 7.



서 한일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다.

#### 5. 기술적 노력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을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 분석하면, 이 조치는 국가별 산업·기업의 경쟁력, 특히 공급 체인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의 70% 정도가 중간재이고, 이 중간재의 기초인 소재 등의 90%를 일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런 변화는 대기업은 물론 특히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엄청난 충격이다. 산업별 공급 체인 현황 및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재구축 방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 및 중장기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 삼성전자의 전 회장 윤종용 인터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에 의하면 "소재 국산화 앞엔 죽음의 계곡 있다"<sup>14)</sup> "연구·개발과 제품 상용화 사이에는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높은 장벽이 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는) 서두르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이다."고 한다.

윤종용(75·사진)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일본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최근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한국 정부·기업의 대처에 대해 "국산화는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연구·개발이나 투자 때 세제 혜택 등을 해주기만 하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선다"고 말했다.

"이번엔 '한국에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고 미래 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소리도 있을'을 일본 사회에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응했다"고 말했다.

#### ◇"국산화 쉽지 않아"

윤 전 부회장은 인터뷰에서 "양국 지도자들은 국민의 반감을 이용해 상대국을 압박하고 있다"며 "험한, 반일 정서가 강해지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의 수출 관리 강화 조치로 부품·소재 수출이 막히면 한국 산업은 큰 피해를 보고, 삼성전자도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국산화에 나서고 있지만, 정밀화학 분야는 앞서 있는 독일·일본·미국과 역사가 짧은 한국의 격차가 크다"고 했다. 국산화가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윤 전 부회장은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의 현실적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는 "노벨상을 받을 만한 과학적 발견은 이론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며 "마찬가지로 수제품 한두 개를 만드는 데 성공하는 것과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은 정말 다르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이 소재 관련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이를 실제 상용화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그는 "지금과 같은 국제 분업 시스템 하에서는 모든 소재·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핵심 소재의 국산화는 추진하되 일본과 외교적으로 갈등을 풀어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4) 박명림, 중앙일보.

15) 조선일보, 2019.08.16 A5면

## 6.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지식인, 종교계 및 시민 협력

### 6.1. 지식인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등 일본 지식인 75명이 지난 25일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와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서명운동을 알리는 성명에서 단도직입적으로 “한국이 적이나”고 아베 정부에 물었다. 이들은 “이번 조치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적인 행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부가 수출규제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복 조치(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들은 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라는 아베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한 청구권협정은 양국 관계의 기초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아베 정권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억울한 피해를 입은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국제법의 상식적 해석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들은 여기에 더해 “일본은 한국을 침략해 식민지 지배를 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대립하더라도 특별하고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 자체가 그동안 일본이 큰 혜택을 받아온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일본 경제에도 크게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무역 덕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일본이 경제와 무관한 이유로 무역 보복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앞서 세계 유력 언론들도 아베 정부의 이런 이중적 태도를 “위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어리석은 무역 전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베 정부의 무모한 수출규제가 분업과 협업으로 구축된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본에서 방탄소년단(BTS)의 인기는 압도적이며, (연간) 300만명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하고 700만명이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며 “인터넷 우익 등이 아무리 외쳐도 일본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 서로 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sup>16)</sup>고 촉구했다.

### 6.2. 종교계

종교계도 한일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 가톨릭 주교는 “한·일 갈등, 가해 책임 인정 않는 일 정부가 문제”<sup>17)</sup>라는 것을 지적했다.

“징용 등 배상청구 빠진 게 근원”...화해·평화 촉구 담화문 발표

일본 가톨릭 정의와평화협의(정평협) 회장 가쓰야 다이치 주교(사진)는 15일 “현재 일본과 한

16)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03662.html#csidxd61b92137613598a86edd96a778308f>

17) 한겨레, 2019.08.15 17

국 간 긴장의 원인은 심층적으로는 일본의 조선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그 청산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고 남겨진 문제에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문제의 핵심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식민지 지배의 역사에 대한 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자세와 이에 분노하는 피해국, 한국인들 마음 사이에 벌어진 틈에 있다”고 밝혔다. 가쓰야 주교는 한·일 정부 관계의 화해를 향한 가톨릭 정평협 담화문을 내고 “우리가 소중한 이웃인 한국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화해와 평화가 깊어지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자”고 말했다.

그는 “한·일 복수의 전문가에 따르면 협정 본문과 체결까지의 협상 과정으로 판단할 때 한일청구권협정이 대상으로 한 것은, 통상의 합법적인 계약에 근거한 채권·채무관계뿐이며, 거기에 식민지 지배에 의거해서 징용한 때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중심에 박혀 있는 가시인 식민지 지배의 책임에 관한 애초 합의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들어 있지 않은 것, 이것이 한·일관계 교착의 근원인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일본 정부에 의한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이 퍼지는 것의 배경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며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100년 이상 전부터 일본이 간계와 강박으로 조선을 침략했는데, 그 수법이 지금도 같다고 분노해서 그것이 불매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어떻든 간에, 일본과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니 정치가 독주해서 사람들의 우호관계를 손상시켜선 안된다”며 “양국 정부는 상대를 ‘비우호국’으로 간주해 국민들 사이에 위협과 증오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자국 정치의 동력을 얻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이 과거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를 했던 나라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특히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문제 해결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를 기초로,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대화하는 것 이외의 길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조약이나 청구권협정에 집착해서 해석의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면, 한·일 간의 진정한 우호관계를 쌓아 올리기 위해 명확한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본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웃 나라나 그 국민에 대한 역사수정주의,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 등의 풍조를 진지하게 시정하여, 정확한 역사인식과 반성을 해야 한다”<sup>18)</sup>고 했다

### 6.3. 소통과 공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시민사회의 향의 물결에 동참하되 과연 어떻게 향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할까. ‘일본제품을 사지 않는 운동’만큼이나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운동’이 중요하다. 일본인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그 정당성은 인정받을 수 있는 향의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국내 곳곳에서 수많은 자발적 일본제품·여행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50여 곳이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실천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본은 우리의 향의 대상이 일본과 일본인이 아니라 아베 정부와 극우세력임을 확실히 알리는 것이다. 또한, 일본제품과 여행은 거부할지언정 일본 사람들과의 친선과 교

18)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151700001&code=960206#csidx98a379b7880e741874ee55a958f4b3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151700001&code=960206#csidx98a379b7880e741874ee55a958f4b31)

류는 소중히 여긴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사실 우리 시민사회는 이미 이러한 지혜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최근 서울 중구청이 관내에 ‘노 재팬(No Japan)’ 깃발을 내걸자 아베 정권에 반대해야지 일본인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돼 결국 하루 만에 깃발을 내리게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비록 일본제품은 안 쓰지만, 주변의 일본인과 더 잘 지내려 노력하거나 일본여행은 안 가지만 우리를 방문한 일본인 여행객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친절할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도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조치와 극우 역사관에 반대하는 양심적 일본인들과 연대하고 이들을 우리의 우군으로 삼는 방식이다. 현재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의 이름으로 한·일 양국 시민단체들이 함께 평화적 연대 운동을 이끌고 있으며, 일본 내부에서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5,000여 명에 이르는 일본의 양식 있는 지식인들이 ‘한국은 적인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나아가 인권과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평화적 국제주의에 뜻을 같이하는 전세계적 시민사회 세력과 함께 갈 수 있다면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

## 7. 마무리하기

크로아티아 출신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는 세르비아인들에 의해 자기 민족들이 학살당한 인종청소의 피해를 어떻게 용서했는가를 그의 책 「베푼과 용서」<sup>19)</sup>에서 담담히 묘사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분”으로 묘사한다. 2차 세계 대전 600만의 유대인 학살의 강제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기록한 「나이트」<sup>20)</sup>의 저자 엘리 위젤도 용서를 통해 모든 아픔과 고통을 극복했다. 그렇다. 하나님은 원수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 그 분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닮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남을 미워할 권리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수로 행할 때(롬 5:10)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제는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무한한 용서. 그 대상이 일본이라도. 이 용서가 인과응보의 업과 윤회의 악의 보복을 끊을 수 있다. 그것은 힌두교와 불교에서 발견할 수 없는 복음과 기독교 안에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용서의 일을 맡기셨다. 그런 점에서 이 용서가 한·일 갈등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 5:18-19)

---

19)

20)